

# 시진핑 종신집권 들끓는 중국

## 인민해방군, 국가기관 첫 지지

### “마오시대 돌아가나” 잇단 비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폐지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인민해방군(PLA)이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개헌에 지지를 표명했다.

더타임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7일 1면 보도를 통해 “전군의 장교와 병사, 그리고 무장경찰부대가 개헌 제안에 굳건한 지지를 나타냈다”면서, 개헌 제안이 “모든 병사와 모든 중국 민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방군보는 개헌 제안이 당과 국가의 새로운 업적과 경험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이뤄진 주요 이론적 견해와 핵심 정책 노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방군보는 이어 개헌 제안이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개헌 제안에 대한 내부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은 잇따라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법 전문가인 뉴욕대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제롬 코언 교수는 개헌 제안은 공산당이 마오쩌둥 독재 통치의 고통스러운 교훈들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연임 제한 철폐는 또 다른 장기간의 가혹한 탄압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을 신호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런던대 정치학자 겸 역사학자인 스티브 창은 개헌 제안에 대한 반대가 없는 게 우려스럽다면서 “중국의 미래가 공산당의 올바른 행보에 달린 상황에서 정책 토론이 줄어들수록 일이 잘못 들어설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우려했다.

SCMP는 많은 중국 관측통들에게 시 주석의 연임 제한 철폐 개헌은 놀라운 것은 아니나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개헌은 시 주석의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추진돼온 반부

패 사정 작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시도가 중국 경제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1980년대 이래 최강의 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이 집권연장을 목적으로, 경제 건설성 유지에 필요한 개혁·개방을 일정 부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28일 진단했다.

외국 기업인들과 경제학자들도 시진핑 1인 체제하의 중국 경제가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며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공정성고는 거리가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단기적으로는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가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 주석의 권력집권이 점차 기업활동을 막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중국 경제를 더욱 불확실하게, 그리고 덜 신중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주축을 이룬다. /연합뉴스



27일 베이징의 텐안먼 광장 상점에 시진핑 얼굴을 담은 기념품 앞에 종신독재 상징인 마오쩌둥 기념품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유엔 인권 논하는 자리서 日 간부 “위안부 강제연행 확인 안돼”

### 강경화 장관 언급에 반론

강경화 외교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호리이 마나부 일본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HRC에서 연설을 통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일본군과 관련해 의한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 26일 강경화 장관이 UNHRC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한 반론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강 장관은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리이 정무관은 한일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으로 정권이 변해도 책임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는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해 확인이 가

난한 자료는 없었다며 강제연행했다는 견해는 고 요시다 세이지(2000년 사망) 씨가 날조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신문사의 한곳이 (요시다 씨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크게 보도한 것이 (위안부 강제연행 주장이) 국제적으로 퍼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호리이 정무관은 연설 후 기자들을 다시 만나 한일합의로 국제사회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한국측이 위안부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비판하며 “국제사회에서 오해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입장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동일본대지진 뒤 7년...7만명 아직도 피난민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7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7만명 이상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지난 28일 보도했다.

부흥청에 따르면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동일본대지진으로 피난한 이재민은 7만3349명으로 집계됐다. 동일본대지진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다. 리히터 규모 9.0의 전례를 찾기 힘든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고 도호쿠(東北) 지방에는 최대 20m 높이의 지진 해일(쓰나미)이 몰려왔다. 이로 인해 1만5826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피해가 더 컸던 것은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치면서 냉각 기능이 마비되는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핵연료가 녹아 내리며 수소 폭발이 발생했고 방사성 물질이 대거 흘러나오자 인근 주민들은 자의든 타의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들 중에서는 친족이나 지인의 거주지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이 1만9632명이나 됐다. 전체 피난자수가 지난해 비슷한 시기 통계인 12만3000명에서 그나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에어포스원 가격 1조원 깎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세대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조달 프로젝트 제조사인 보잉과 39억 달러(약 4조1800억 원)에 27일(현지시간) 협상을 끝냈다. 백악관은 또 ‘협상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대폭 깎아 10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손을 흔드는 모습. /연합뉴스

## 트럼프 만사위 기밀정보 취급 권한 강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사친) 백악관 선임 고문의 기밀정보 취급 권한이 강등됐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지난 23일 쿠슈너 선임 고문을 포함, 백악관에서 ‘일급비밀 또는 특수정보급’(Top Secret/SCI-level)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허가권을 갖고 있던 고위 관계자들에게 기밀정보 취급 권한을 ‘기밀급’(Secret level)으로 강등한



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쿠슈너 선임 고문은 ‘대통령 일일브리핑’은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일일브리핑은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작전 정보는 물론 가장 민감한 성격의 정보원과 동맹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극비 분석 보고 등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 영어만 공식어 OK ?

### 美 미시간주 하원 통과

미국 미시간주가 영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 찬반논란이 일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 주 하원은 영어를 주정부 공식 언어로 명문화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2표 대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이관됐으며, 릭 스나이더 주지사(공화) 서명까지 별 무리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주정부 공식 문서와 행정 절차 등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미시간주의 사실상 공식 언어인 영어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영어가 미시간 주 공용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신규 이민자 또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들을 소외시키는 분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을 발의한 톰 배럿(공화) 의원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32개 주가 앞서 유사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영어를 공식 언어로 선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반이민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틔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 경매물건 (추천)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30억2천4백  
최저:16억9천

**\*목포시 창평동 (근린상가)**  
감정:4억5천9백  
최저:2억5천7백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감정:4억8천7백  
최저:3억4천1백

**010-6670-9800  
062)382-5500**

## 경매교육 (2월초 개강)

**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학부터 매매입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① 광산구 용동 (공장) 감정가 9억6천7백 → 최저가6억7천 7백 토지:500평 건물:445평  
② 서구 풍암동 중흥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2백  
③ 서구 마름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백

[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

**010-6670-9800  
062)382-5500**

## 법률 경매 (추)대신경매

1) 남구 노대동(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30억2천4백→최저 16억9천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9억 3천 → 최저3억 3천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6) 광산구 신창동 (원룸) 감정:3억8천2백 → 최저:3억8천2백

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13억1천9백 → 최저13억1천6백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가 5억4천7백 → 최저가 3억6백

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숙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

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

11) 나주시 성북동 (근린주택) 토지:439평 감정:32억6천 → 최저:14억6천

12)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전원주택) 감정:3억6백 → 최저:2억1천4백

**A.P.T · 주택 · 공장 · 토지 (기타)**

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

③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아파트 (45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⑥ 서구 벽진동 (토지) 222평 감정 8천6백 → 최저 8천6백

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⑧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 2억6천7백 → 최저 1억8천7백

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 5천

**010-6670-9800 062)382-5500**